
신해양강국 도약을 선도하는
해양수산부 업무보고

2022. 8. 1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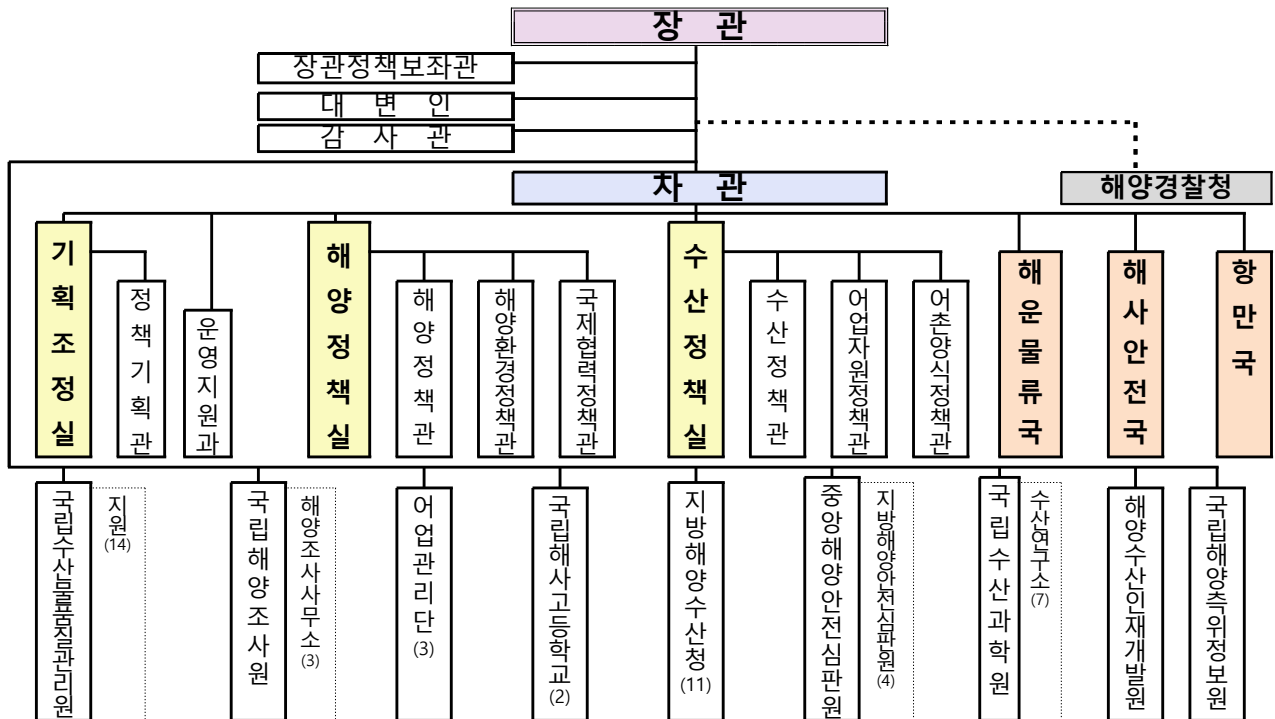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일반 현황	1
II. 핵심 추진과제	2
1. 지속가능한 수산업,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	3
2.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	4
3.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	5
4. 깨끗한 바다, 안전한 연안 조성	6
III. 공통과제 이행계획	7

I. 일반 현황

◆ 해양영토(44만km², 육상면적의 4.4배)의 보전·이용·개발을 통해 해양산업을 진흥하고,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사명으로 하는 통합 해양행정기관

1 기구 및 조직 현황



2 인원 현황 : 정원 4,257명(본부 614명, 소속기관 3,643명)

구 분	직급별	계	정무직	고공단	3.4급	4급	4.5급	5급	6급이하	기타
합계	정 원	4,257	2	39	17	83	75	449	3,120	472
	현 원	3,977	2	40	17	85	64	442	2,867	460
본부	정 원	614	2	15	13	36	52	214	274	8
	현 원	646	2	16	12	43	52	225	277	19
소속 기관	정 원	3,643	-	24	4	47	23	235	2,846	464
	현 원	3,331	-	24	5	42	12	217	2,590	441

3 예산 현황 : 6조 3,849억원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2021년 예산 (A)	2022년 예산 (B)	증 감 (B-A)	(B-A)/A
계	61,628	63,849	2,221	3.6
■ 수산·어촌	26,736	28,326	1,590	5.9
■ 해운·항만	21,099	20,290	△809	△3.8
■ 해양·환경	11,700	13,083	1,384	11.8
■ 과학기술연구	2,093	2,150	57	2.7

Ⅱ. 핵심 추진과제

비전 및 목표

“도약하는 해양경제,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”

- 어 가 소 득 : ('21년) 5,200만원 → ('27년) 6,500만원
- 국 적 선 대 : ('21년) 9,300만톤 → ('27년) 1억 2천만톤
- 신산업 매출 : ('21년) 3.5조원 → ('27년) 15조원
- 1등급 해역 : ('21년) 11개(42%) → ('27년) 16개(62%)

핵심 추진과제

1. 지속가능한 수산업,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

- ▶ (수산업) 지속가능한 생산, 소비자 선호 반영 유통 구조 마련
- ▶ (어촌) 정주여건·소득·복지 개편, 청년귀어귀촌 확대로 자생력 확보
- ▶ (연안여객) 소외도서 제로화로 도서주민의 보편적 교통권 보장

2.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

- ▶ (해운산업) 민간 해운시장 활성화, 공공부문 역할 재정립
- ▶ (항만물류) 항만 스마트화, 서비스 다양화로 부가가치 제고
- ▶ (물류난) 선적공간, 화물 보관장소 제공으로 물류난 극복 지원

3.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

- ▶ (유망산업) 해양레저관광·해양바이오·해상교통 등 유망신산업 육성
- ▶ (과학기술) 극지 연구 확대, 해저 공간 창출로 과학기술 역량 제고
- ▶ (창업투자) 연안권 창업투자 지원, 모태펀드 투자 확대

4. 깨끗한 바다, 안전한 연안 조성

- ▶ (해양생태계)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, 해양보호구역 확대
- ▶ (연안재해) 사전 예·경보,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
- ▶ (해양공간) 질서있는 해상풍력, 해상경계 획정으로 갈등 완화

[1] 지속가능한 수산업,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.

① 수산업 **지속가능 생산 + 유통·가공 구조 개선 → 식량주권 강화**

- 잡는 어업은 ❶자원관리형 어업 구조 강화, 기르는 어업은 친환경 ❷스마트양식으로 전환
 - 대서양 연어 국내 생산 개시('25)
 - ❶총허용어획량 적용 확대(생산량 29 → 60%), 바다숲(여의도 면적 62배) 조성
 - ❷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소(부산, 양양, 포항, 경남 고성, 신안, 제주) 구축(~'26)
-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위판장 현대화
- 김(7억불)을 식품수출 최초 10억불 품목으로 육성
- 정부비축물 방출, 상생할인 행사 확대(4회)로 가격 안정화 유도
 -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(239억원) 신속 집행(6~10월)

② 어촌 **정주여건 개선, 소득 안전망 구축 + 귀어귀촌 확대 → 자생력 제고**

- 어촌(300개) 유형별로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“新활력 증진사업” 추진
 - * (예시 : 거점형) 공공 300억원 + 민자 100억원, 복합생활시설, 유통판매시설 등 건립
-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('23)으로 소규모 어가 소득 제고
- ❶주거+❷일자리+❸기술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 귀어귀촌 활성화
 - ❶임시주거시설 제공('22), ❷어선('22)·양식장('23) 임대 제공, ❸귀어학교 확대('22)

③ 연안여객 **도서주민 보편적 교통권 보장**

- 여객선 미기항 도서 40개에 선박 투입을 지원하여 소외도서 제로화

[2]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① 해운산업 투자 인센티브 + 공공 역할 재정립 → 시장기능 활성화

- HMM 민간이양 여건 조성
- 선박투자 세제혜택 도입(조세 예타, '22.9), 선박펀드 확대(21→36억불)
 - 불황기에 대비하여 선박 매입·임대 전문 리스사 설립('26)

② 항만물류 자동화 전환 + 서비스 다양화 → 초일류 경쟁력 확보

- 부산항 신항 완전 개장('26)으로 물량처리 능력 11% 제고
-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(자동하역, 무인수송) 테스트베드 구축('26)
 - 부산항 진해신항은 스마트 메가पोर्ट로 건설('29, 1단계)
- 항만 배후지역을 제조·물류기업의 첨단 산업공간*으로 조성
 - * IoT 기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('25), 해외 U턴 기업 배후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
- LNG 급유시설('24, 울산)·수리조선소 설치('26, 부산) 등 서비스 다변화

③ 물류난 극복 선적공간 제공 + 인프라·제도 강화 → 기업애로 해소

- 임시선박 지속 투입, 중소기업·농수산물 전용 선적공간 제공
- 수출기업 전용 화물 보관소 운영(부산)

[3] 역동적인 신해양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.

① 유망신산업 **인프라 투자 + R&D 지원 → 연매출 15조원 시장 창출**

- 마리나 거점 확대,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
 - 레저·관광·문화가 결합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('23, 마스터플랜)
 - 낚시·물놀이·용품산업이 결합된 낚시복합타운 건립(3개소)
-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소재 국산화(30→50%) 지원,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
- 디지털 해상교통정보(전자해도, 바다 Navi. 등), 자율운항·친환경 선박 기술 고도화, 선박 첨단 소·부·장* 기술 개발 등 해상교통산업 육성
 - * 고망간강 소재 국제표준, 평형수 처리장치 부품 국산화, 선체 부착생물 제거 장비

② 과학기술 **극지·대양 연구 확대 + 해저 공간 창출 → 글로벌 위상 강화**

- 남극 내륙기지 건설(세계 6번째),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('26)
- 해저 채류기술(수심 30m, 3인, 30일) 개발('26)
 - * IT기업 수중데이터센터, 잠수사 훈련 공간, 생명·의료 연구 등 수행 기대

③ 창업투자 **창투센터 + 모태펀드 확대 → 신산업 대표기업 육성**

- 전국 연안권 창투지원센터 설치(7→11개)
- 해양수산 모태펀드 확대(3천억→5천억원)

[4] 깨끗한 바다,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겠습니다.

① 해양생태계 해양쓰레기 저감 + 해양보호구역 확대 → 건강성 회복

- 해양쓰레기 ①발생 - ②수거·처리 - ③재활용 전주기 관리 강화로 '27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50% 저감
 - * ①어구·부표 보증금제, 스티로폼 소재 대체 인증부표 100% 보급('24)
 - ②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('23, 7척), One-Stop 처리선박 개발('26)
 - ③재활용 전문업체 육성
- 해양보호구역을 영해 면적의 17%(現 9.2%)까지 확대, 국가해양정원 (가로림만) 등 생태관광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
 - 수족관 남방큰돌고래('22.3분기) 및 흰고래(벨루가, '23.下) 해양방류 추진

② 연안재해 예·경보 강화 + 안전인프라 확충 → 사전 예방체계 구축

- 해일, 이안류 등 해양 재난 도착 30분전 알람 예·경보 시스템 구축
- 침식·재해 고위험 해안가(20개소)를 완충구역으로 전환
 - 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전한 재해안전항만(61개소) 구축('24~)

③ 해양공간 해상풍력 상생 유도 + 해상경계 획정 → 해양공간 갈등 완화

- 어업인 상생·협력 등 질서 있는 해상풍력사업 추진 지원
-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(가칭) 「지자체 해상경계법」 제정('23)

Ⅲ. 공통과제 이행계획

[1] 규제혁신 방안

◇ **신속·과감한 규제혁신**으로 해양수산 분야 민간경제 역동성 제고
* 해양수산 규제혁신 TF('22.6~), 대국민 공모(6.7) 등을 통해 **과제 발굴**

-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로 기업활동 지원
-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
- 성장단계 규제 개선으로 해양 신산업 동력 창출
- 생산-유통-소비 전주기 구조개선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

[2] 공공기관 혁신방안

◇ 17개 산하기관(공기업 5, 준정부기관 4, 기타공공기관 8 등) 혁신 추진

- 조직 개편, 자산 매각 등으로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

[3] 위원회 정비방안

◇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(25개) 절반 이상 정비

- 유사·중복 기능, 실적·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 추진



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주요내용

1. 지속가능한 수산업,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

1. 수산업 지속가능한 생산, 유통·가공 구조 개선

- ✓ 자원관리형 어선어업, 스마트 양식업으로 전환
- ✓ 노후 위판장 현대화, 수산물 할인행사 확대, 정부비축량 방출,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

2. 어촌 정주여건·소득·복지 개선, 귀어귀촌 확대로 자생력 확보

- ✓ 어촌 유형별로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“어촌 생활력 증진사업” 추진
- ✓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('23)
- ✓ 주거+일자리+기술 귀어귀촌 패키지 지원

3. 연안여객 도서주민 보편적 교통권 보장

- ✓ 여객선 미기항 도서 40개에 선박 투입 지원

2.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

1. 해운산업 민간 해운시장 활성화

- ✓ 민간투자 세제혜택 도입(조세특례 예타, '22.9), 정책펀드 확대(21→36억불)
- ✓ 선박 매입·임대 전문 리스회사 설립('26)

2. 항만물류 스마트화,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

- ✓ 광양항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('26), 진해신항 스마트 메가포트('29) 구축
- ✓ LNG 급유시설·수리조선소 설치로 부가가치 창출

3. 물류난 극복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지원

- ✓ 임시선박 투입, 중소기업·농수산물 전용 선적공간 제공, 수출기업 전용 화물 보관소 제공



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주요내용

3.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

1. 유망신산업 해양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15조원 시장 창출

- ✓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, 낚시 복합타운 조성
- ✓ 해양바이오 핵심소재 국산화(30→50%), 권역별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
- ✓ 디지털 해상교통, 자율운항·친환경선박 기술 고도화, 선박 첨단 소·부·장 기술 개발

2. 과학기술 극지 연구 확대,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

- ✓ 남극 내륙기지 건설(세계 6번째),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('26)
- ✓ 해저 채류기술(수심 30m, 3인, 30일) 개발

3. 창업투자 해양수산 창업투자 활성화, 스타기업 육성

- ✓ 전국 연안권 창투자지원센터 구축(7→11개), 모태펀드 확대(0.3→0.5조원)

4. 깨끗한 바다, 안전한 연안 조성

1. 해양생태계 해양생태계 공존 체계 구축

- ✓ 해양쓰레기 발생-수거-처리-재활용 전주기 관리 강화
- ✓ 해양포유류(돌고래) 해양방류, 국가해양정원 조성

2. 연안재해 연안재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

- ✓ 해상 재난 발생 30분 전 예·경보 시스템(K-Ocean Watch) 구축
- ✓ 침식·재해 고위험 해안가 완충구역 전환, 재해안전항만 구축

3. 해양공간 해양공간 갈등완화

- ✓ 어업인 의견수렴 강화 등 질서 있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지원
- ✓ 지자체 간 갈등 해소 위해 (가칭) 「지자체 해상경계법」 제정 추진('23)